

12-13 (통권 제 484호)

2012. 4. 13.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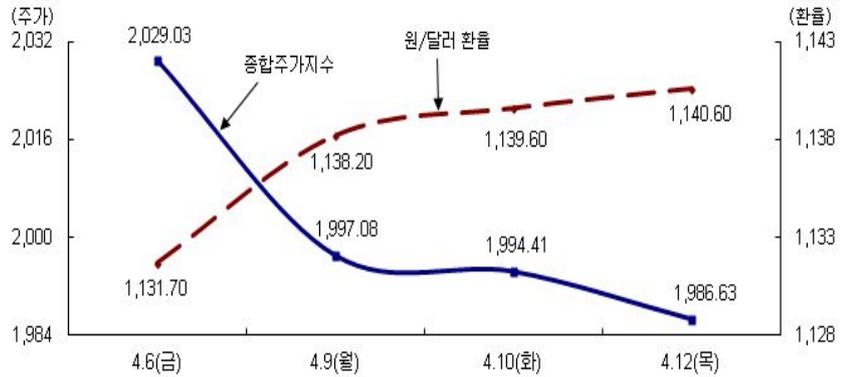
- 위기 속에 더 빛나는 독일경제의 기초체력
- 제조업 기반 수출경쟁력이 핵심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6~4.1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위기 속에 더 빛나는 독일 경제의 기초체력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대표 집필 : 조호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위기 속에 더 빛나는 독일 경제의 기초체력 -제조업 기반 수출경쟁력이 핵심

1. 독일, 유럽의 파워하우스로 부상

유로존 재정위기가 그리스의 채권탕감 등의 위기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경제규모 5위인 스페인 등 경제규모가 큰 나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도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였다. 반면, 독일은 안정적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명실상부한 유럽 내 절대강자(Power house)로서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독일, 파워하우스 부상의 비결

독일의 국가경쟁력이 유지되는 비결을 경제, 재정, 금융, 정치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확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독일은 높은 수출경쟁력과 고용기적을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독일의 높은 경제성과는 노동비용 상승세가 유럽 주요국 대비 낮아 기업의 경쟁력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고,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2009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 852개)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수출이 2011년에는 1.4조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둘째, 재정적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 점'이다. 독일은 국가부채와 민간부채를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Agenda2010'을 통해 2004년 이래 꾸준히 실시해온 경제 구조개혁과 가계의 높은 저축률 및 안정된 주택가격 관리 등이 버블 형성을 억제시켰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적 측면으로는 '대외충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다. 2008년 이후 지속된 위기로 프랑스, 영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된 반면, 독일 채권은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는 독일의 경제 건전성 대비 PIIGS국가에 대한 익스포져(Exposure, 위험노출액)가 상대적으로 적고, 대외 충격에 대한 위기 방어 능력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신뢰받는 정치 체계 구축'이다. 독일은 낮은 부패, 투명성 및 혁신 등을 통해 프랑스, 영국에 비해 안정된 정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편, 독·프·영의 정치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新 재정협약이 합의됨에 따라 독일의 유로존에 대한 영향력도 커졌다. 향후에도 독일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 가장 많은 29.07%의 재원을 부담해야 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위기국가들 지원도 요구받고 있어 독일의 정치적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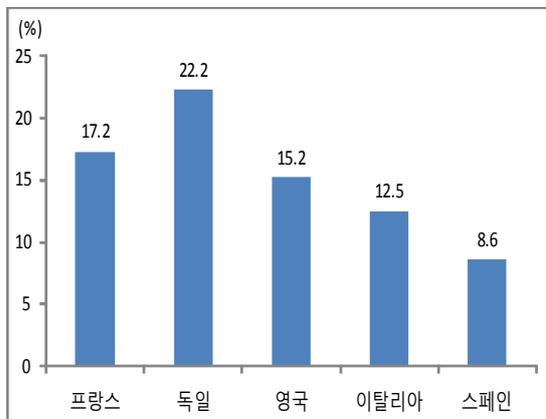
독일은 높은 수출 경쟁력과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이 전망됨에 따라 프랑스, 영국과의 차별성이 더욱 커져 유럽 내 절대강자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빈번한 경제 위기에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향후 복지 지출 확대에 있어 재정 여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기 요인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체계화 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금융 거래세 도입에도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

1. 독일, 유럽의 파워 하우스로 부상

- 유로존 재정위기가 그리스의 채권탕감(Haircut) 등의 위기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등 경제규모가 큰 나라로 확대되고 있음
 - 유럽 내 경제규모 5위에 해당하는 스페인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구제금융 지원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높아짐
 - 2009년 이후 스페인은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정긴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이로 인한 국채 발행 부진으로 금리는 상승하고 CDS 프리미엄도 재차 상승하면서 스페인 금융·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한편, 유럽 내 경제비중이 2위, 3위인 프랑스와 영국도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독일은 안정적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명실상부한 유럽 내 절대강자(Power House)로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S&P는 지난 1월 13일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AA+로 한단계 강등됐고, 무디스도 프랑스, 영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함
 - 유럽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22.2%이고, 프랑스 17.2%, 영국 15.2%로 3 국가가 유럽 경제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음
- 유로존 재정위기의 진앙지에 위치했음에도 독일이 높은 국가 경쟁력 유지 할 수 있었던 비결을 경제, 재정, 금융, 정치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주요국의 유럽 내 경제비중>



자료: IMF,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1년 유럽 전체 GDP 대비 비중임.

<독프영의 신용등급 조정>

	독일	영국	프랑스
S&P	AAA (안정적)	AAA (안정적)	AAA → AA+ (부정적)
Moody's	Aaa (안정적)	Aaa (부정적)	Aaa (부정적)
Fitch	AAA (안정적)	AAA (안정적)	AAA (부정적)

자료: 국제금융센터.
주: ()는 전망이며 2012년 2월 13일 기준.

2. 독일, 파워하우스 부상의 비결

○ (경제적 요인) 프랑스와 영국의 경제 회복은 지체된 반면, 독일은 높은 수출 경쟁력과 '고용기적'을 통해 안정적 경제 성장을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에 연이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3국의 경제회복이 차별화 됨

- 독일의 성장률은 2009년 -5.1%에서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10년 3.7%, 2011년에도 3.0%를 기록하며 회복. 특히 실업률은 "고용기적"으로 불리며 크게 낮아짐
- 반면, 영국과 프랑스도 2009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이후 소폭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실업률이 9%와 8%대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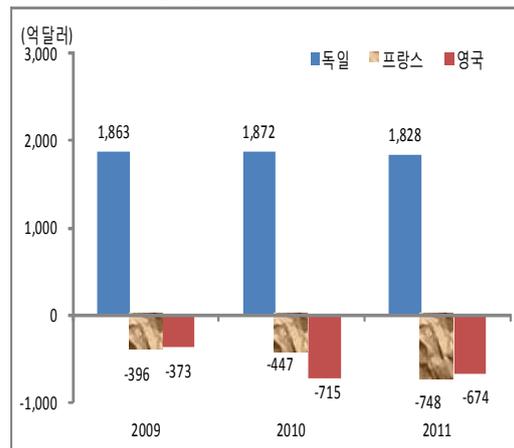
- 독일은 높은 수출 경쟁력으로 경상수지에서도 흑자를 지속한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적자를 지속

-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매년 1,800억 달러에 달하나 영국과 프랑스는 300~700억 달러의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제조업에 기반¹⁾한 높은 수출 경쟁력을 지닌 독일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도 852개에 달해 경상수지의 연속 흑자로 연결되고 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1위 품목은 각각 124개, 88개로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²⁾

<GDP성장률과 물가, 실업률 추이>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독일	-5.1	3.7	3.0	0.2	1.2	2.5	7.8	7.1	5.9
프랑스	-2.7	1.5	1.7	0.1	1.7	2.3	9.5	9.8	9.7
영국	-4.4	2.1	0.8	2.2	3.3	4.5	7.6	7.8	8.0

<경상수지 추이>



자료: EUstats.

주: 영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11월까지 평균.

1) 3국의 산업구조는 독일이 광공업(30.1%), 서비스업(69.0%), 농림어업(0.9%)으로 구분되고 영국은 광공업(23.6%), 서비스업(75.7%), 농림어업(0.7%)으로 프랑스 광공업(20.5%), 서비스업(77.5%), 농림어업(2.0%)으로 나뉨

2) 국제무역연구원, 2009년 기준임.

○ 이러한 독일의 높은 경제성과는 노동비용의 낮은 상승세와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기인함

- 유럽 주요국 대비 낮은 노동 비용 상승세가 독일의 인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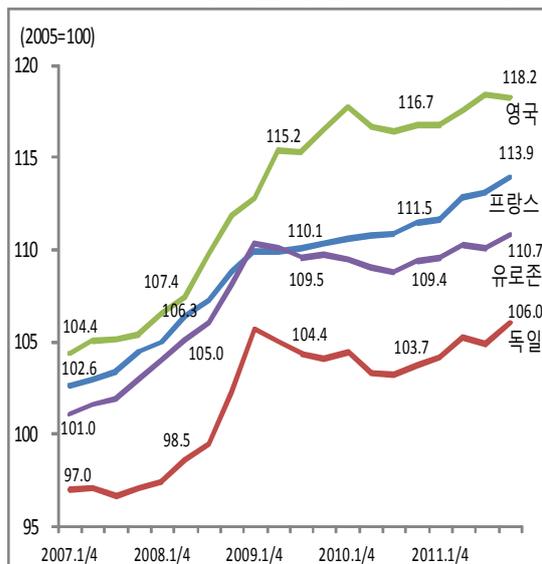
·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은 2007년 1/4분기 97.0(2005=100)에서 2011년 4/4분기 106으로 9p 상승한데 그친 반면, 영국은 동기간 104.4에서 118.2로 13.8p, 프랑스도 102.6에서 113.9로 11.3p 상승하여 독일 보다 상승폭이 컸음

- 유로존 위기로 인한 유럽 경제의 전반적 침체에도 꾸준한 수출시장 다변화로 2011년 1.4조 달러 수출의 최고 기록을 달성

· 독일의 역내 수출 비중은 2000년 56.5%에서 유로화 도입과 유럽연합의 신규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2007년 64.6%로 높아졌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2011년 59.2%를 기록

· 특히, 독일의 PIIGS로의 수출 비중은 2000년 14.5%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 10.7%로 낮아진 반면, 중국과 러시아 신흥지역으로의 수출은 동기간 각각 1.6%와 1.1%에서 6.1%와 3.2%로 크게 높아지며 수출 시장이 다변화됨

<분기별 단위노동비용 지수 추이>



자료: OECD.

<독일의 수출, 역내외 무역비중 >

연도	수출 (억\$)	역내 무역 비중	역외 무역 비중		
			중국	러시아	
1995	5,238	58.1	41.9	1.4	1.4
2000	5,502	56.5	43.5	1.6	1.1
2005	9,772	63.4	36.6	2.7	2.2
2006	11,221	63.2	36.8	3.1	2.6
2007	13,237	64.6	35.4	3.1	2.9
2008	14,506	63.3	36.7	3.5	3.3
2009	11,210	62.3	37.7	4.7	2.6
2010	12,615	60.0	40.0	5.6	2.8
2011	14,756	59.2	40.8	6.1	3.2

자료: 독일 통계청.

주: 역내무역비중은 독일의 수출 중 1995년은 유럽 14개국, 2005~06년은 24개국, 2007년부터는 26개국으로의 비중임

- (재정적 요인) 영국과 프랑스는 재정적자 지속으로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독일은 국가부채와 민간부채를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
 - 영국과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황금률³⁾보다 높고 국가부채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독일은 재정적자가 -3% 이하로 낮추었고 국가부채도 감소세
 - 독일의 재정적자는 2011년 GDP대비 -1.1%로 황금률인 -3% 이하로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부채도 2010년 GDP 대비 83.2%에서 2011년 81.5%로 하락
 - 반면, 영국과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2011년 GDP대비 8.6%, 5.7%로 유로존과 선진국 평균보다 높았음. GDP 대비 정부부채도 영국은 80.8%, 프랑스 87%에 달하고 2012년에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2012~2013년 만기부채 상환과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독일은 GDP의 10.5%, 8.1%에 불과한데 프랑스는 GDP의 20%, 영국은 13~14%에 달함
 - 또한, 국가부채와 더불어 유럽의 또다른 뇌관으로 지적되는 민간부채도 독일은 프랑스, 영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EU위원회는 적정민간 부채규모를 GDP의 160%를 권고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독일은 GDP대비 128.1%로 안정적이거나 프랑스 159.8%, 영국 212.2%로 매우 높은 상황임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추이>

	재정적자/GDP			정부부채/GDP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독일	-3.2	-4.3	-1.1	74.4	83.2	81.5
프랑스	-7.6	-7.1	-5.7	79.0	82.4	87.0
영국	-10.4	-9.9	-8.6	68.4	75.1	80.8
선진국	-9.0	-7.6	-6.6	93.7	99.7	103.5
유로존	-6.5	-6.3	-4.3	79.4	85.3	88.4

자료: IMF, 'Fiscal Monitor(2012.1월)'.

<총 자금조달 필요액(GDP 대비)>

	2012년			2013년		
	만기부채	재정적자	필요자금	만기부채	재정적자	필요자금
독일	9.4	1.1	10.5	7.4	0.8	8.1
프랑스	16.2	4.6	20.8	16.2	4.0	20.2
영국	7.6	7.0	14.7	8.2	5.1	13.3
선진국	21.6	6.1	27.7	21.0	4.8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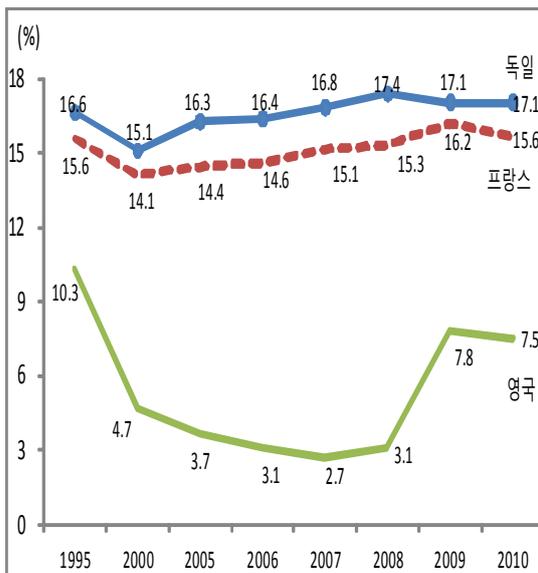
자료: IMF, 'Fiscal Monitor(2011.9월)'.

3) 유로존 재정협약의 황금률은 GDP대비 재정적자 3%, 국가채무 60% 이내임.

○ 꾸준한 경제 구조개혁과 높은 저축률, 안정된 주택가격 등이 독일의 국가와 민간부채 구조의 건전성을 높게 유지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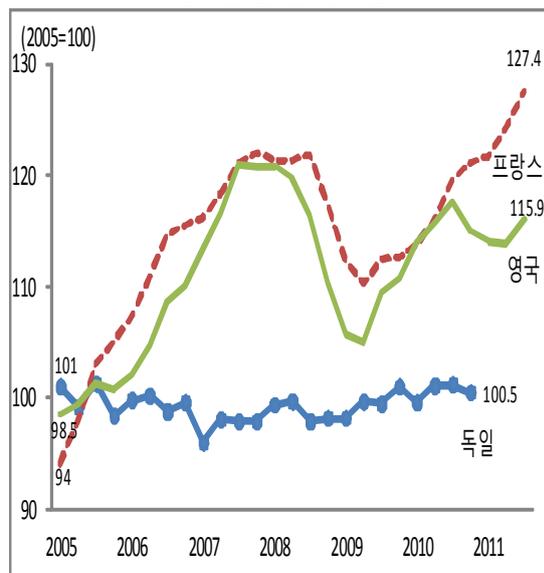
- 독일은 Agenda2010을 통해 사회복지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교육·훈련 강화의 경제 구조개혁을 2004년 이래 꾸준히 실시해 왔음
 - 2003년 3월 독일 슈뢰더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실업률,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및 동서독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경제 개혁을 실시하였음
 - 아젠다2010은 1)해고보호법의 적용범위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2)실업수당 삭감, 연금수급 연령 상향 조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3)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4)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한 직업훈련 과정 개선 등을 포함
- 독일의 높은 가계저축률과 안정된 주택가격 등도 버블 형성을 억제하고 국가와 민간 부채의 건전성을 유지시키는 요인임
 - 독일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 중 저축률은 2005년 16.3%에서 소폭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17.1%로 높아져 개별 가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있음
 - 프랑스도 2010년 15.6%의 높은 가계 총저축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독일 대비로는 낮고 영국은 2005년 이래 3%대로 매우 낮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대로 높아졌으나 독일 대비 10%p 낮은 수준임

<가계 총저축률 추이>



자료: EUstats.

<주택가격 추이>



자료: EUstats.

○ (금융적 요인) 2008년 이후 지속된 위기로 프랑스, 영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진 반면, 독일 채권 등은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이 부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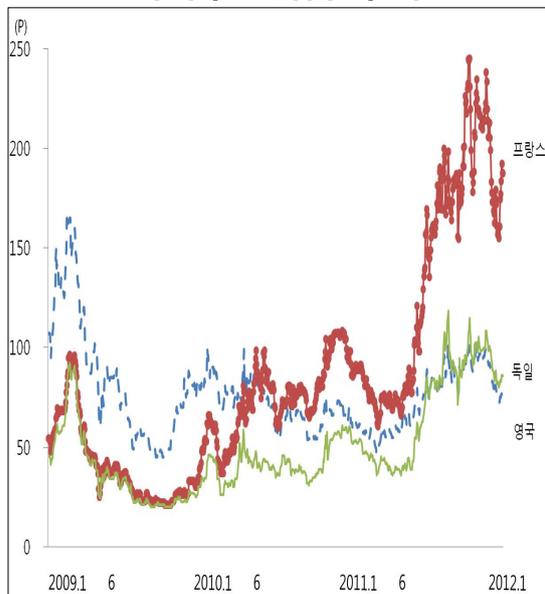
- 프랑스의 국가부도위험은 재정위기 심화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된 반면, 독일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

- 유로존 재정위기와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국가부도위험 금리(CDS)는 2011년 11월 25일 245bp까지 급등하였고, 2012년 들어서도 150~200bp 사이로 독일, 영국에 비해 100bp 이상 높게 유지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
- 반면, 독일도 유로존 금융위기로 CDS 금리는 상승하였으나 2012년 들어 70~80bp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안전자산으로서의 독일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독일 국채금리가 미 국채금리보다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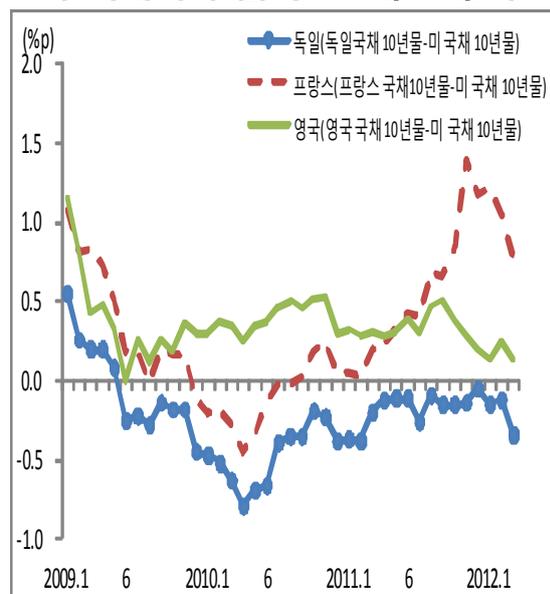
-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도 독일 국채(10년물) 금리가 미 국채보다 더욱 하락하면서 금리스프레드가 2009년 이후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프랑스와 독일 국채 금리 간 스프레드도 2009년 0.5%p 수준에서 꾸준히 확대되어 2012년 1월에는 1.4%p로 커지는 등 금융시장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음

<국가부도위험 추이>



자료:Datastream.

<미 국채대비 금리스프레드 추이>



자료:OECD, 현대경제연구원.

○ 독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경제 건전성 대비 PIIGS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Exposure)가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대외 충격에 대한 위기 방어 능력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임

- 독일 은행들의 PIIGS에 대한 익스포져도 높은 수준이나 전체 유럽계 은행의 1/3 수준에 달하는 프랑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독일 은행의 PIIGS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는 2011년 9월말 현재 4,557.5억 달러로 전체 유럽계 은행의 23.2%를 차지하나 프랑스는 31.5%에 달함
 - 특히, 프랑스는 그리스, 포르투갈에 대한 익스포져가 전체 유럽계 은행의 절반에 달해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도 채무재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막대할 것임
- 또한, 프랑스와 영국은 대외투자보다 외국인 투자의 유입 규모가 더 커서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경우 외부 충격에 취약하나 독일은 대외투자가 더 많음
 - 2010년 기준 순국제투자를 살펴보면, 독일은 GDP대비 38.4%로 대외투자가 외국인투자보다 크나 프랑스와 영국은 -10%, -23.8%로 외국인 투자 규모가 훨씬 큼
- 독일은 위기 방어 능력 제고 등을 위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규모도 2배 정도 증대시켜 왔음
 - IMF에 따르면, 독일의 대외자산은 2007년 1,326억 달러에서 2011년말 2,389억 달러로 1,063억 달러 증가됨. 반면, 동기간 프랑스는 1,157억 달러에서 1,722억 달러로 영국은 973억 달러에서 1,219억 달러로 확대됨

<독·프·영 은행의 PIIGS에 대한 익스포져>

(단위: 억 달러)

	유럽계 은행				비유럽계 은행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1,047.2	479.0	186.4	115.4	77.0
아일랜드	3,576.0	290.3	1,015.7	1,370.9	748.8
이탈리아	7,357.7	3,724.0	1,446.9	234.0	766.0
포르투갈	1,758.3	257.6	299.9	930.8	67.5
스페인	5,902.7	1,445.2	1,608.7	612.7	767.5
PIIGS합계	19,641.9	6,196.0	4,557.5	3,263.8	2,426.8

자료: BIS, 2011년 9월말 기준.

4) 포르투갈은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공공적자가 더욱 확대되고, 차입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그리스에 이어 채무재조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임.

- (정치적 요인) 독일은 낮은 부패, 투명성 및 혁신 등을 통해 프랑스, 영국에 비해 안정된 정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
- 독일은 뛰어난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낮은 부패도, 투명성에 바탕한 안정된 정치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는 높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
 - 2011~12년 WEF 국가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독일은 6위(5.41), 영국 10위(5.39), 프랑스는 18위(5.14)를 기록하였고, 국제 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2011년 부패지수도 독일은 14위(8.0)로 영국 16위(7.8), 프랑스 25위(7위) 보다 높음
 - EIU에서 발표하는 정치 불안정성 지수도 독일은 165개국 중 150위로 정치 안정성이 매우 높은 반면, 영국 132위, 프랑스 110위로 정치 불안이 상대적으로 큼
- 한편, 유로존 위기 해결을 있어서도 독·프·영의 극명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주장한 신 재정협약의 출범이 가시화 되는 등 영향력이 더욱 커짐
 - 독일은 유로존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위해 강력한 긴축재정과 황금률을 준수하는 신 재정협약의 명문화를 주장. 반면, 영국은 지나친 긴축에 반대하였고, 프랑스도 ECB 개입 또는 유로본드 발등 등을 요구
 - 재정위기를 항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EU 전체로 확대한 신 재정협약에 영국은 체코와 더불어 가입하지 않았고, 프랑스는 자국의 부채 문제가 큰 만큼 유로존 전체에 대한 독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임

<주요 경쟁력 및 정치 불안정 지수 순위>

	독일	프랑스	영국
IMD 경쟁력	10위 (87.8)	29위 (71.4)	20위 (80.3)
부패지수	14위	25위	16위
WEF 경쟁력	6위 (5.41)	18위 (5.14)	10위 (5.39)
유럽혁신 국가순위	3위 (0.700)	11위 (0.558)	6위 (0.620)
EIU 정치 불안정지수	150위 (3.8)	110위 (5.3)	132위 (4.6)

자료: IMD 외 2011년 기준이며, EIU 정치 불안정 지수는 순위가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음.

<신 재정협약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황금률 준수	- 재정적자 GDP 3% 이내 - 국가부채 GDP 60% 이내
자동 제재	- 황금률 위반시, EU 집행위에서 자동 제재
명문화	- 각국 헌법과 법률에 반영
발효 조건	- EU 25개국이 가입 서명 - 12개 회원국에서 비준이 완료되면, 2013년부터 자동 발효될 예정

자료: 내외신 종합.

- 독일의 정치적 역할 증대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 독일이 가장 많은 재원을 부담해야 하고 독일의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위기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등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임
- 독일은 AAA의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EFSF에서 전체 보증의 29.07%로 가장 많은 부담을 담당
 - 이외에 프랑스가 21.8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신용등급이 AA+로 낮아져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
 - 한편, 보증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17.9%), 스페인(11.9%) 등은 재정위기 국가로 분류되어 자국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영국 역시 신 재정협약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유로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고 유로존 'Patient 112⁵⁾' 라고 불리울 정도로 재정 위기 신호도 높은 편임
- 더불어 유럽 재정위기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위기 국가들의 부채 감축과 더불어 경제적 성장이 필수적인데, 이에 따라 독일의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이 중요한 상황임
 - 독일이 전세계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9.6%에서 2010년 7.3%로 낮아짐. GDP대비로도 2010년 57%에 그친 반면 미국은 70%에 달함

<EFSF의 대출여력 및 회원국 보증 분담 현황>

		2010.6.7	2011.6.24	2011.10.18	비중
AAA	독일	119,390	211,046	211,046	29.07
	네덜란드	25,144	44,446	44,446	6.12
	핀란드	7,905	13,974	13,974	1.92
	룩셈부르크	1,101	1,947	1,947	0.27
AAA 미만	프랑스	89,657	158,488	158,488	21.83
	오스트리아	12,241	21,639	21,639	2.99
	벨기에	15,292	27,032	27,032	3.72
	이탈리아	78,785	139,268	139,268	19.18
	스페인	52,353	92,544	92,544	12.75
	기타 9개국	38,132	69,399	15,616	2.15
전체		440,000	779,783	726,000	100

주: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2011년 10월 18일 보증한도가 개정되면서 보증의무가 없어짐.

5) 112는 영국의 IMF 회원국 번호임.

3. 시사점

- (향후 전망) 독일은 재정 건전성이 높고 높은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럽 내 절대강자로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임
 - 독일은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더라도 유로존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신홍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임
 - 독일은 제조업에 기반한 높은 수출 경쟁력, 낮은 부패도, 혁신 능력을 통해 영국, 프랑스에 비해 국가 경쟁력⁶⁾도 높게 유지하고 있음
 - 특히, 독일은 경제적, 재정적, 금융적 및 정치적 요인 모두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고 프랑스, 영국과의 차별성도 커지고 있어 유럽 내 절대강자 (Power House)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임
 - 독일은 견조한 경제성장, 대외 경쟁력 및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유로존 문제 해결의 중추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단일 통화의 도입 당시부터 독일이 주장해온 회원국에 대한 재정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신 재정협약이 공식화됨에 따라, 유로존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대한 독일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임
- 반면, 유럽 경제의 약 32%를 차지하는 프랑스, 영국은 경제 회복 지연,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이 높아 유럽 내 양극화 해소, 유로존 재정위기의 궁극적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요인들이 많아 유로존 위기가 지속될 경우 이들 국가의 신용등급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존함
 - 특히, 프랑스 은행의 익스포저가 많은 포르투갈이 그리스에 이어 채무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목되고 있어 프랑스 금융시장의 불안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임

6) p.8 <주요 경쟁력 및 정치 불안성 지수 순위> 참조.

- 특히 이들 국가는 경제 회복 지연, 낮은 수출경쟁력, 국가·민간 부채 확대 등으로 독일과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내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빈번한 경제 위기에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위기 요인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독일이 유로존 위기의 진앙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경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 경쟁력이 높고, 수출 시장 다변화로 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의존도 낮춘 바, 우리도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경제의 버팀목임을 재인식하고 복지 지출 확대에 있어 재정 여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험 대처 능력이 취약했던 문제를 드러냈던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프랑스가 2012년 8월부터 역내 재정위기 극복, 추가 세수 확보,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완화하기 위해 0.1%의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예정이고 독일 등도 찬성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세 도입에 따른 득실 등을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함

기업정책연구실 조호정 선임연구원(2072-6217, chjss@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1.8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5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1.7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4월 6일	4월 12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2.18	2.05	-0.13%p
	엔/달러	81.19	80.66	77.66	82.33	80.95	-1.38¥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3061	1.3120	0.0059\$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060	12,987	-73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688	9,525	-163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54	3.50	-0.04%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31.7	1,140.6	8.9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2,029.0	1,986.6	-42.4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4월 6일	4월 12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103.26	103.65	0.39\$
	Dubai	88.80	106.75	104.89	120.74	117.56	-3.18\$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06.49	305.61	-0.8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3	4.2	3.5	3.6	3.3	3.6	4.0	
	민간소비 (%)	0.0	4.1	2.8	3.0	2.0	1.2	2.2	2.5	
	건설투자 (%)	3.4	-1.4	-11.9	-6.8	-4.6	-4.0	-6.5	2.3	
	설비투자 (%)	-9.8	25.0	11.7	7.5	1.0	-3.4	3.8	5.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328	294	26	55	69	127	277	170
		무역수지 (억\$)	404	412	71	84	63	104	321	290
	수출 (억 \$) 증감률 (%)	3,635 (-13.9)	4,664 (28.3)	1,310 (29.6)	1,427 (18.7)	1,412 (21.4)	1,416 (10.0)	5,565 (19.3)	6,344 (14.0)	
	수입 (억 \$) 증감률 (%)	3,231 (-25.8)	4,252 (31.6)	1,239 (26.2)	1,343 (27.1)	1,349 (27.6)	1,313 (13.4)	5,244 (23.3)	6,054 (1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3.0	3.8	4.0	4.3	4.0	4.0	3.5	
실업률 (%)		3.6	3.7	4.2	3.4	3.1	2.9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4.0	3.7	3.8	3.7	3.6	3.4	3.6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